지역개발연구 제37권 제2호, 2005년 12월, pp.43-66

영광원전이 영광지역에 미친 영향: 행정력 손실액 추정*

이 상 호**·조 수 미***

영광원자력발전소는 영광지역사회의 발전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영광군의 행정업무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원전사고로 인한 집단민원과 주민들의 집회 및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갈등과 마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량이 과중되어 직, 간접적으로 행정력 누수를 겪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광원전에 따른 행정력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해 회계자료와 영광주민 및 공무원 면접 및 설문을 통해 직접비용 손실액, 간접비용 손실액, 그리고 기회비용 손실액으로 나누어 행정력 손실액을 분석하였다.

주제어: 행정력 손실액, 영광원전

Ⅰ. 서 론

영광원자력발전소(영광원전)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량 35%를 생산하고 전체 전력 생산의 1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영광원전은 지난 1986년 1호기 건설이후 2002년 6호기를 완공하면서 영광지역사회의 발전에 다양한 형태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행정업무는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아울러 영광원전이 가동한 후 20년이 지난 2005년까지 영광군에서는 총 124건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집단민원과 집회 및 시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 본 연구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영광군에서 위탁받아 수행한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친 영향 평가" 용역보고서의 행정력 손실분야를 재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를 완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영광군청 재난안전관리과의 임동환 계장, 정진삼 계장, 이인성씨에게 감사드린다.

**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경제학부 부교수(제1저자),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겸임연구원, Tel: 062-530-1553, E-mail: sangho@chonnam.ac.kr

*** 전남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E-mail: esumi@hanmail.net

1) 영광원전이 영광군 지역사회에 지원하는 각종 사업은 지역경제부분, 행정사업부분, 복지사업부분, 관광 및 문화사업부분, 농축산 및 환경, 해양사업 부분 등으로 구분되어 김태기 외(2005)에 정리되어 있다.

2005년 영광군청에 의하면, 일상적인 원전업무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갈등과 마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량이 과중되어 직, 간접적으로 행정력 누수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군행정력의 30%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광원전에 따른 행정력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회계자료와 영광주민 및 공무원 면접 및 설문을 통해 행정력 손실액을 크게 직접비용 손실액, 간접비용 손실액, 그리고 기회비용 손실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2] 직접비용 손실액은 원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일부 직접성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의 지출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또한, 간접비용 손실액은 직접 원전 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군청의 각과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누수되는 행정력의 손실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의 원전업무에 대한 인건비 및 경상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 손실액은 주민들의 각종 분쟁이나 집회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 누수분을 개념화한 것으로 집회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그리고 사전 준비 및 사후처리시간 등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손실액을 추정한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영광군의 행정조직과 재정규모에 있어서 행정력 누수와 연관된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제 3장은 원전과 관련된 영광군 공무원의 주요업무 및 집단민원·집회 시위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제 4장은 공무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력 손실액을 직접비용, 간접비용, 기회비용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제 5장에서는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Ⅱ. 영광군의 행정조직과 재정규모

1. 행정조직

영광군은 총면적 472.9㎢, 인구 72,78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3개의 읍과 8

2) 자원 및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은 당사자와의 직접적인 설문을 통해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가 진실되게 보고(truth-telling)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반면, 본 연구는 직접적인 회계자료와 면접상의 데이터를 직접 사용하여 비용을 추정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 영광군청 부서별 공무원 수

(단위: 명)

구분	5급 이상	6급	7급	8급 이하	지도직	계
총계	30	122	195	235	30	612
(%)	(4.9%)	(19.9%)	(31.9%)	(38.4%)	(4.9%)	(100%)

자료: 2003 영광통계연보

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발지법)이 적용되는 지역(원전 5km 이내임)은 백수읍, 법성면, 홍농읍 등 3개읍이 해당한다.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영광군의 공무원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612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외부용역 업체에서 지원하는 청경 5명을 포함시 총 정원 617명) 부서별로 볼 때, 원전 직접관련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이고, 그 외 다른 부서는 간접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3] 재난안전관리과는 총 17명의 공무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원전관리 담당, 화생방 담당, 재난방재 담당, 지역협력 담당, 민방위 담당으로 나눠져 있다. 이중 재난방재 담당, 원전관리 담당, 화생방 담당부서에서 총 8명이 원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표 2>는 영광군 주요부서별 원전관련 주요업무를 정리하였다. 특히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원전관련 직접적인 행정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003년 5월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실시하여 1997년 시행된 종전의 산식을 폐지하고 새로운 표준화 지수에 근거한 산식을 규정하여 실시하였다. 표준화지수(SI: Standard Index)란 표준적인 행정수요 1단위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표준적인 공무원 수를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하며, 이는 동일한 행정수요를 처리함에 있어 지역적 행정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 수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도출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표준화지수에는 낙후지역면적, 해안선길이, 관광객수, 생활보호자수, 공원면적, 도시공원면적, 미포장도로면적, 시설물면적, 공공건물면적, 주간인구지수, 도시계획대상면적, 임야면적, 경지면적, 상공업종사자수, 하천연장, 자동차등록대수, 보건시설면적, 환경위생처리시설용량 등 18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3) 원래 주민자치과내 재난안전담당과 화생방담당 부서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었으나 2005년 7월 직접관련부서인 재난안전관리과가 분리・개편되었다.

<표 2> 원전관련 주요업무

구분	주요부서	주요업무
재난안전 관리과	원전관리담당	- 원전 환경방사능 감시 및 기구운영 -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 원전 건설관련 각종 민원사항 협의 조정 - 원전관련 특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원전관련 행정협의회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 원전관련 주민보호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 기타 원전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화생방 담당	- 화생방 방호계획 관련사항 - 화생방 분대원 관리 운영 - 원전방사능 방제대책 계획 수립 시행 - 원전 방사능 사고예방 및 수습대책 업무 - 기타 화생방(원전재해) 방호에 관한 사항 - 원전 방사능 방재 관리 및 주민 상시 교육
	재난방재담당	- 재난 방재 종합계획 수립 - 재해 위험지구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 - 재난상황 종합관리 및 평시 보고체제 구축규모 유형별 동원계획 수립 운영 - 인명구조 관련 장비유지 관리 - 도시가스, 항만, 화학물질 등 안전점검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의 점검 지도 - 재난관련 여론동향 및 정보수집·분석·전파 및 자료통계 관리 전산화
	지역협력담당	- 국가기반보호체계에 관한 사항 - 재난안전 및 위험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 재해복구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분석평가
	민방위담당	- 인력동원계획 수립 및 시행 - 민방위대 조직 편성 - 민방위대원 및 주민교육 훈련
건설과	관리담당	- 군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추진
사회복지과	사회보장담당	- 주민복지시책의 수립 추진
재무과	세정담당	- 지방세 목표액 산정 및 세수 추계
	징수담당	-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
종합민원과	민원담당	- 민원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 복합 인·허가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 상담.
	허가담당	- 오·폐수, 폐기물 배출시설 등 환경분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건축담당	- 빈집 정비사업 및 정보센터 운영관리

구분	주요부서	주요업무
주민자치과	주민자치담당	- 읍면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 읍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위원회 관리 및 지원
	법무통계담당	-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 법령의 질의 회시(지방자치, 소송, 행정심판) - 법제자료의 조사수집 요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기타 법무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전략개발담당	- 공무원소양교육 관리 - 군민의식교육 종합계획 관리 - 청결, 질서, 친절 등 선진문화 군민운동 - 실업대책 관련 업무 - 공공근로사업 추진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원전지원사업 추진
	도시담당	-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
총무과	행정담당	- 원전관련 주민여론 및 동향관리 - 반핵단체 활동상황 관리 - 원전 가동 중지 집단시위 민원대책 - 방폐장 관련 찬·반단체 여론관리
해양수산과	해양관리담당	- 해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추진 - 해양오염사고 수습 총괄(피해보상) - 해양오염 감시 및 방제 - 적조대책 및 피해복구 - 해양오염원 조사 및 오염행위 단속 - 바다청소 및 방치폐선 처리 - 기타 해양오염방지 업무에 관한 사항
환경녹지과	환경보호담당	-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추진 - 기타 환경정책 일반에 관한 사항
	환경지도담당	- 유해화학물질 관리 -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 배출시설(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동신고 및 지도 점검 - 기타 환경지도점검 일반에 관한 사항
	환경정화담당	-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 - 폐기물 처리(자치단체) 시설 설치 운영 - 쓰레기종량제 및 청소행정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 기타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자료: 영광군 내부자료(2004)

<표 3> 전남 주요군의 표준화지수

SI가 1보다 작은 지역	표준화지수	SI가 1보다 큰 지역	표준화 지수
해남군	0.99856	곡성군	1.02321
담양군	0.99745	구례군	1.02125
강진군	0.99183	고흥군	1.02426
무안군	0.98946	보성군	1.00422
영광군	0.98823	장흥군	1.01851
화순군	0.98563	영암군	1.00060
		함평군	1.00893
		장성군	1.00356
		완도군	1.00903
		진도군	1.02413
		신안군	1.04448

자료: 2003년도 행정자치부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SI지수가 1이면 기준적인 자치단체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적은 공무원의 수로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게 되므로 행정수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자치단체임을 의미한다. 또한, 1보다 높은 경우에는 많은 공무원의 수로 표준적인 행정수요를 처리하게 되므로 행정수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공무원 표준정원은 표준화지수를 반영하여 인구수, 일반회계 결산액, 지자체 면적, 산하기관수 등을 반영하여 총원을 결정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전남군 지역은 대체로 표준화 지수가 1보다 커서 행정수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영광군은 화순군 다음으로 가장 낮은 0.98823의 표준화 지수를 지니고 있어서 행정수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영광군의 경우 표준정원이 감소된 이유는 표준화지수에서 주민집회 및 시위건수, 재해건수 및 피해복구비 등 민원사항발생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표준화지수가 영광군 공무원 행정력 소요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원전관련한 행정처리비용을 직접,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재정규모

2004년 영광군의 총재정규모는 199,323백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72,704백만원으로 총재정 규모에서 86.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별회계는 26,619백만원으로 13.35%를 차지하고 있다. 영광군의 재정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연평균 9%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0년 17.7%에서 2005년 18.4%로 자립도가 더 높아졌다. 그러나 전남의 경우는 2000년 23.5%에서 2005년 19.9%로 오히려 자립도가 더 낮아졌다. 영광군의 경우 자립도는 시의 자립도 30.2%에 비해서는 낮으나, 전남 군전체의 자립도 10.8%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원전의 재정기여도를 분석해 보면 원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62%에 불과하며,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0.1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영광군의 경우는 4.31%로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은 편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해당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행자부 등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 해당 지자체가 자체로 만든 수입으로, 자체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10%도 안되는 8.76%이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는 0.36%이다. 그러나 영광군의 경우는 자체수입이 21.75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

<표 4>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년도	전남					영광
	전체	도	시군	시	군	
2000년	23.5	15.9	22.2	35.4	14.2	17.7
2001년	22.0	14.7	20.3	32.4	13.2	16.9
2002년	20.4	13.7	18.9	29.7	12.2	19.1
2003년	20.6	14.0	19.2	31.0	12.5	19.9
2004년	20.8	14.2	19.3	31.9	12.2	18.1
2005년	19.9	11.9	17.7	30.2	10.8	18.4

*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재정보전금)/일반회계×100

자료: 전남의 재정규모(www.jeonnam.go.kr)

<표 5> 원전시설의 지방재정 기여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98-02년 예산(납부)액				비율		
		일반회계 예산(A)	자체수입 예산(B)	지방세 예산(C)	원전납부액 (D)	(D/A)	(D/B)	(D/C)
광역	소계	310,380	118,260	96,790	426	0.14	0.36	0.44
	부산	112,010	77,790	65,920	29	0.03	0.04	0.04
	전남	98,240	17,080	11,420	123	0.13	0.72	1.08
	경북	100,130	23,390	19,450	274	0.27	1.17	1.41
기초	소계	31,878	9,531	5,440	835	2.62	8.76	15.35
	기장	4,147	1,688	888	167	4.03	9.89	18.81
	영광	6,409	1,269	678	276	4.31	21.75	40.71
	경주	14,210	4,752	3,169	180	1.27	3.79	5.68
	울진	7,112	1,822	705	212	2.98	11.64	30.07
합계		342,258	127,791	102,230	1,261	0.37	0.99	1.23

자료: 행정자치부,「지방재정연감」, 1999-2003, 기장군, 영광군, 경주시, 울진군 내부자료.

또한 원전으로 발생한 수입은 원전이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5.36%이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0.44%인데, 영광군의 경우 원전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비중이 40.71%로 다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내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 대한 보통교부세의 부과에 있어서 영광군은 지방세 수입증가에 대응하는 보통교부세 감소가 발생하여 재정수입에 있어서 상쇄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호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영광군은 인근에 위치한 9개 군과의 행자부 지방세 교부내역을 비교해보면, 영광군은 9개의 군 중 유일하게 2003년에 비해 지방세 교부금액이 4억 6,300만원 삭감되었다. 그러나, 영광군을 제외한 8개군은 전체금액 기준으로 지방세 교부금액이 2003년에 비해 적게는 24억(보성군)에서 많게는 9억(완도군)까지 늘어났다.

2004년도 교부세의 산정방식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보전율(78.8%)로 계산된다. 이때, 원전수입이 지방세 수입에 반영되기 때문에 원전에서 발생된 지방세는 해당지자체의 수입액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해당지자체로서는 수입액 규모가 그만큼 커지는 것으로 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라 보통교부세액이 작아

지게 된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영광군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영광군의 경우 원전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세 수입은 2004년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82억원

<표 6> 보통교부세 산정관련 시군 비교(전남지역)

(단위: 백만원)

단체별(전남)	인구수 (03.6.30기준)	보통교부세 교부액증감액		증감액 (04-03)
		2004년도	2003년도	
영광군	66,247	60,497	60,960	-463
담양군	51,163	64,296	56,196	8,100
보성군	56,687	74,260	71,814	2,446
화순군	77,725	72,588	64,372	8,216
영암군	64,440	67,269	63,835	3,424
무안군	65,377	68,603	62,431	6,172
장성군	52,734	66,001	58,414	7,587
완도군	62,433	77,860	68,016	9,844
신안군	50,623	79,928	75,349	4,579

자료: 전남 영광군청 국정감사 자료(2004)

<표 7> 원전 지방세 수입과 보통교부세 (원전 수입을 포함한 경우)

(단위: 억원)

년도별	기준재정 수요액 A	기준재정 수입액 B	원전수입* C	재정 부족액 A-B	보통 교부세 D	세수 합계 G=B+D	원전 수입비율 C/G
평균 (3년간)	941	188	82	753	584	772	10.6%
2002년	853	160	65	693	537	697	9.3%
2003년	977	179	45	798	609	788	5.7%
2004년	993	225	136	768	605	830	16.4%

*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해당년도 원전수입부분은 2년전 수입액을 현재년도 수입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실제 수입액과는 시간상 2년의 차이가 있음.

주: 보통교부세 산정식 = 재정부족액 × 보전율

자료: 전남 영광군청 국정감사 자료(2004)

<표 8> 원전 지방세 수입과 보통교부세 (원전수입을 제외한 경우)

(단위: 억원)

년도별	원전수입 제외시 기준재정 수입액 B-C	재정 부족액 A-(B-C)	보통 교부세 E	보통 교부세 증가액 E-D	세수 합계 F=B-C+E	세수 차액 G-F	원전수입 실질기여율 (G-F)/C
평균 (3년간)	106	835	647	63	753	19	23.2%
2002년	95	758	587	50	682	15	23.1%
2003년	134	843	643	34	777	11	24.4%
2004년	89	904	712	107	801	29	21.3%

이며, 이는 3년 평균 기준 지방세 재정수입 + 보통교부세 수입의 10.6%정도를 기여한다고 평가된다.[4)]

한편, <표 8>은 원전이 없는 경우를 가상하여 설정한 경우로, 2004년 기준 최근 3년 평균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는 647억원으로 예상되며, 이 금액은 원전이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3년 평균 63억원이 증가된 금액이다.

따라서, 원전으로 인해 순수 세수입(기준 지방세 재정수입 + 보통교부세 수입)의 증가액은 2004년 기준 최근 3년 평균 19억원으로, 원전수입이 미치는 세수증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는 평균 23.2%로 평가된다. 즉, 보통교부세의 상쇄효과를 감안하면 원전수입의 1/4정도만이 실질적으로 영광군의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Ⅲ. 영광원전관련 집회 및 시위

2005년 영광군청에 의하면 원전 업무추진에 군행정력의 30% 정도가 투입되어 주민들의 마찰 등 타 지자체에 비해 업무량 과중으로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영광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전관련 업무량 실태조사 현황을 분석한 <표 9>에서 보듯이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에 779건이 발생하였으며, 구

4) 국정감사 자료의 추계성격상 2004년 기준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자료는 실제 2000년-2002년까지의 실제자료이다.

체적으로 동기간동안 원전과 관련된 주요 업무 수행내용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표 9> 원전관련 업무 건수(2004.1.1-6.30 6개월간)

계	집회·시위	대책회의	동향보고	민원처리	각종사업	기타
779건	15건	15건	146건	33건	363건	182건

자료: 영광군 내부자료(2004)

<표 10> 원전관련 업무 현황

업 무 명	처리건수
합 계	779건
원전관련 각종 집회 및 시위 현황 ·가마미 주민 이주대책 요구 집회 시위 및 홍농읍 성산리 살리기 대책 요구 집회 등	15건(6,787명 참여)
영광원전안전성 공동조사 범국민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40회(2,050명 참여)
원전관련 동향보고	146회
영광원전관련 비대위, 유치위측 군수면담	5회
영광원전관련 상급기관·부서 영광 방문	8회
영광원전 방사능방재대책 추진관련	3건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 관리운영 지원	12회 46건
영광원전 관련 민원 처리사항 ·가마미 이주대책 및 성산리 살리기 특별지원금 요청 등	33건
원전 소재 5개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1차: 울진군 2차: 영광군, 3차: 울주군, 4차: 서울	4회
원전관련 방사능 비상대비 진료교육	2회
영광원전 실시간 점검시스템 관리운영	150회
원전 기본지원사업 추진	74건
원전 특별지원사업 추진	1건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288건
보조사업 현장지도 점검	4건
보조사업장 사후관리 카드작성 및 점검	년 2회
원전특별회계 결산 합동작업: 읍면담당 공무원 등	년 2회

자료: 영광군 내부자료(2004)

특히, 2003년을 전후로 원전관련 집회·시위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66회 317일로 1회당 5일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주민 76,232명이 집회 시위로 인해 동원되어 1회당 주민 1,150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출동한 전경은 2만여명으로 1회당 3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표 11> 원전관련 민원현황

민원사항	내 용
홍농읍 성산리 주민 이주 요구	220세대 652명
원전 인근마을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호소	
홍농읍 가마미 주민이주대책 요구	193세대 539명
영광원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반려요구	
갑상선 암 관련 역학조사	전국 타지역에 비해 3배이상 높음
원전 납부 지방세, 보통교부세 산정 자료에서 제외	원전납부 지방세는 교부세에서 감액되어 군재정에는 실익이 없고 재정자립도만 높여 정부의 각종 신활력지역지원 시책 등에서 배제되고 있음.
방사능 방재 대책 전담기구 시설	1과 3담당 20명
지방공무원 표준정원 조정	집단행동 대처 등 업무증가로 근무여건이 악화되어 공무원들의 원전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구획어업 피해보상	193건(실뱀장어 안강망 125건, 새우주목망 56건, 각 망 12건)
어민생계대책 피해보상	광역 해양조사 용역 조사결과에 따른 보상
어선어업 피해 보상	어획 감소요인 조사 용역 후 보상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 방안 방류제 철거(1,136m) 및 5, 6호기 가동중단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찬·반에 따른 주민 갈등 등	- 유치반대단체: 52개 기관 시민·사회단체 - 유치찬성단체: 3개 시민·사회단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신활력지역 선정 요구	
성산리 ⇔ 계마리간 도로 건설 요구	

주: 2004년 12월까지의 민원임.
자료: 영광군 내부자료(2004)

집단민원의 예를 들면, 정부의 신활력지역 선정 배제와 관련하여 영광군 의회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52명의 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참여한 사례가 있다. 이들은 영광원전 때문에 받는 부당한 대우를 시정시켜 지역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범 군민 결의 대회 추진위를 결성하여 영광원자력발전소 정문 앞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집회에서는 영광원전이 가동된 지난 20년 동안 정부의 당초 홍보대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기보다 영광쌀에 영광쌀임을 표시하지 못하는 등 지역이미지 실추와 각종 농수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 그리고 혐오시설물의 기피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같은 직·간접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2003년 12월 5호기 방사성 오염폐수 바다 유출의 대책 등 원전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의 신설과 해당 공무원의 인건비의 추가부담에 대한 영광군과 의회의 요구를 정부가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원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교부세 산정자료에 이미 포함되어 군 재정에는 실익이 없고 재정자립도만 높여 소도읍 육성 등 연간 30억원씩 지원되는 낙후지역에서 전남 17개 군 단위 중 영광군만 제외되어 각종 정부시책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 원전과 관련된 집단 민원은 구체적으로 성산리 주민 생계대책 요구, 가마미 주민 이주 요구, 갑상선 암 관련 민원, 구획 어업 피해보상, 어민 새계대책 및 어업 어선 피해 보상 요구 등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와 온배수 저감기능을 상실한 생태계 파괴 방류제 철거 및 5·6호기 가동 중단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지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1>은 영광군에서 발생한 원전관련 집단민원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Ⅳ. 행정력 손실액의 추정: 공무원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력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주민들과 공무원 면접 및 직접설문을 통해 직접비용 손실액, 간접비용 손실액, 그리고 기회비용 손실액으로 나누어 각기 추정하였다. 직접비용 손실액은 원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접성 인건비와 경상비, 그리고 기타 사업비 지출액을 통해서 추정하였다. 간접비용 손실액은 직접 원전 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군청의 각과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누수되는 행정력의 손실

로 해당 부서의 인건비 및 경상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기회비용 손실액은 각종 분쟁이나 집회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 누수분으로 집회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그리고 사전 준비 및 사후처리시간 등을 고려한 손실액을 추정한 것이다.

설문 및 면담 기간은 2005년 7월 15일~8월 5일로 약 20일간 이루어졌으며 군산하에 재직중인 공직자 6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설문은 1차적으로 설문 대상자를 직급별 부서별 현원기준으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을 통해, 60명을 선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차적으로 직접 해당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1. 행정부서별 예산규모

영광군의 부서별 인원 및 예산규모는 <표 12>와 같이 집계되었다.

<표 12> 부서별 공무원 인원 및 예산규모

(단위: 천원, 명)

부서	인원	인건비	경상비	기타	총계
재난안전관리과	17	606,945	596,768	3,926,054	5,129,767
건설과	21	660,687	2,000,000	21,740,000	24,400,687
기획감사실	17	769,521	1,524,026	1,644,244	3,937,791
농업기술센터	38	1,080,430	460,826	1,389,115	2,930,371
농정과	21	765,255	720,753	26,351,683	27,837,691
문화관광과	19	791,404	1,626,676	11,407,181	13,825,261
보건소	68	2,169,487	1,149,210	1,874,132	5,192,829
사회복지과	17	660,810	50,068	24,263,413	24,974,291
상하수도사업부	25	914,762	32,958	2,238,305	3,186,025
의회사무과	10	417,324	321,777	9,396	748,497
재무과	34	1,231,879	799,321	664,793	2,695,993
종합민원과	29	1,017,332	9,266	27,100	1,053,698
주민자치과	10	455,067	246,960	476,783	1,178,810
지역경제과	20	800,946	600,000	792,000	2,192,946
해양수산과	18	695,256	225,686	3,327,764	4,248,706

부서	인원	인건비	경상비	기타	총계
환경녹지과	23	797,454	408,104	7,984,133	9,189,691
총무과	31	1,160,888	4,188,693	1,250,300	6,599,881
발지법 적용 지역					
백수읍	21	703,000	400,000	400,000	1,503,000
법성면	20	669,527	321,764	408,557	1,399,848
홍농읍	22	736,480	549,836	500,262	1,786,578

2. 행정력 손실액의 추정

영광군 원전에 따른 회계상의 행정력 손실은 크게 직접비용 손실액, 간접비용 손실액, 그리고 기회비용 손실액 등 3부분으로 나누어서 추정하였다.

1) 직접비용의 추정

직접비용 손실액은 원전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의 직접성 인건비, 경상비 및 기타 사업비로 산정되었다. 이 금액은 2004년도의 경우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액기준으로 약 51억3,000만원의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에서 인건비와 경상비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적인 원전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는 화생방 담당부서와 원전관리 담당부서 그리고 재난방재 담당부서에 소속된 인력 8인을 기준으로 재조정하여 산정했다. 그리고 기타 사업비 39억 2,600만원 중 발지법에 근거한 지원사업비(소득증대사업, 공고지출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등)는 18억7,000만원에 달한다. 결국, 직접적인 원전업무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비용 손실액은 17명중 8명에 해당하는 금액비율(47%)을 재조정한 인건비와 경상비 약 5억6,500만원과 발지법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기타사업비 20억5,600만원을 합산하는 경우 약 26억2,100만원으로 파악된다.

<표 13> 공무원 행정력 손실액: 직접비용의 추정

(단위: 천원)

재난안전 관리과 (원전담당부서)	인건비 손실액 (47%)	경상비 손실액 (47%)	기타 사업비 손실액(52.4%)	합계
	285,600	280,000	2,056,000	2,621,600

한편, 주민설문분석의 결과를 보면 적절한 원전안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상액이 지원되어야 한다. 김태기 외(2005)의 내용에서 보듯이 주민설문분석의 결과 평균수준의 원전안전교육을 위해서는 설문결과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설문결과의 가중평균값(185)은 보통이라는 응답에 대한 전체 평균값(300)의 61.7%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 38.3% 정도의 추가적인 보상이 수요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표 14>에서 보듯이 인건비와 경상비의 38.3%를 보상하여 기타 사업비와 합산한 금액 28억3,500만원이 수요측면의 적절한 직접비용의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금액은 <표 13>에 비해 약 2억1,400만원을 보상한 금액이다.

이와 더불어 공무원 설문분석결과에 의하면 재난안전관리과의 행정력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은 평균적으로 인건비 수준에서 약 14%, 일반 행정비 수준에서 약 40%로 파악되고 있다. <표 14>에서 보듯이 인건비의 14% 및 경상비의 40%를 보상하여 기타 사업비와 합산한 금액 27억7,000만원이 공급측면의 적절한 직접비용의 수준으로 평가되며, 이 금액은 <표 13>에 비해 약 1억5,000만원을 보상한 금액이다.

결국, 이상의 분석에서 수요측면의 보상수준이 공급측면의 보상수준을 약 600만원 가량 상회하나 거의 유사한 보상수준으로 파악되며 평균적으로 보면 약 28억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전체적인 직접비용 손실액에서 약 1억8,000만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이다. 부서별 예산규모에서 보듯이 인건비와 경상비가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며 추가적인 인력보강에 1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을 의미하며 이는 3명 정도의 추가적인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공무원 표준화 지수에 대응하여 영광군 자체에서 재조정하여 요구하고 있

<표 14> 공무원 행정력 손실액: 직접비용의 보상액 추정

(단위: 천원)

재난안전관리과 (원전담당부서)	주민 설문평가	인건비 보전비 (보상율: 38%,)	경상비 보전비 (보상율: 38%)	기타 사업비	공급측 적정비용
		393,300	386,400	2,056,000	2,835,700
	공무원 자체평가	인건비 보전비 (보상율: 14%)	경상비 보전비 (보상율: 40%)	기타 사업비	수요측 적정비용
		324,900	392,000	2,056,000	2,772,900

는 적정인원 20명(현인원 17명 + 추가인원 3명)과 비슷한 결과이다.

2) 간접비용의 추정

앞절의 <표 3>에서 보듯이 행정자치부의 표준화 지수조정에 따라 영광군의 인력배정이 감소함으로써 전체 영광군 공무원 행정력은 원전에 따른 간접비용적 손실을 입고 있다. 즉, 간접비용은 직접 원전업무를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군청의 각

<표 15> 공무원 행정력 손실액: 간접비용의 추정

(단위: 천원, %, 시간)

부서	연간 업무시간	연간 참여율(%)	인건비 손실액	경상비 지출비율%	경상비 손실액	손실액 합 계
재난안전관리과	250	0.114	36,514	30.0	179,030	215,544
건설과	24	0.011	7,207	2.5	50,000	57,207
기획감사실	50	0.023	17,489	0.6	9,144	19,013
농업기술센터	25	0.011	12,278	0.1	461	12,738
농정과	24	0.011	8,348	0.1	721	9,069
문화관광과	25	0.011	8,993	2.5	40,667	49,660
보건소	24	0.011	23,667	0.1	1,149	24,816
사회복지과	0	0.000	0	0.0	0	0
상하수도사업부	30	0.014	12,474	0.1	33	12,507
의회사무과	500	0.227	94,846	1.0	3,218	98,064
재무과	25	0.011	13,999	1.25	9,992	23,990
종합민원과	50	0.023	23,121	0.0	0	23,121
주민자치과	250	0.114	51,712	5.0	12,348	64,060
지역경제과	500	0.227	182,033	7.5	45,000	227,033
해양수산과	75	0.034	23,702	15.0	33,853	57,555
환경녹지과	100	0.045	36,248	0.2	816	37,064
총무과	60	0.027	31,661	1.2	50,264	81,925
발지법 적용 지역						
백수읍	140	0.064	44,737	1.3	1,300	46,037
법성면	25	0.011	7,608	6.5	20,915	28,523
홍농읍	580	0.264	194,163	3.0	16,495	210,658
총합계	-	-	830,800	-	475,406	1,306,206

과에서 원전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누수되는 행정력의 손실액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 15>에 나와 있다.

이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인건비 손실액 약 8억3,100만원, 경상비 손실액 약 4억7,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체적인 간접손실액의 합계 약 13억원이 간접적으로 손실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표 16> 공무원 행정력 손실액: 기회비용의 추정

(단위: 천원, %, 시간)

부 서	집단민원및집회 시위 관여			사전면담 및 사후처리문제동원			연간 시간	연간 참여율 %	인건비 손실액 (천원)	경상비 지출 비율 %	경상비 손실액 (천원)	손실액 합계 (천원)
	연간 참여 횟수	평균 시간	연간 참여 시간	사전 면담 사후처 리경험	평균 시간	연간 참여 시간						
재난안전관리과	10	5	50	30	5	150	200	0.091	29,211	30.0	179,030	208,242
건설과	3	2	6	1.5	2	3	9	0.004	2,703	2.5	50,000	52,703
기획감사실	3	1	3	1.5	0.5	0.8	4	0.002	1,312	0.6	9,144	10,456
농업기술센터	1	0	0	0	0	0	0	0.000	0	0.1	461	461
농정과	3	5	15	0.5	3	1.3	16	0.007	5,652	0.1	721	6,373
문화관광과	2	1	2	2	1	2	4	0.002	1,439	2.5	40,667	42,106
보건소	0	0	0	0.1	0	0	0	0.000	0	0.1	1,149	1,149
사회복지과	0	0	0	0	0	0	0	0.000	0	0.0	0	0
상하수도사업부	2	3	6	0	0	0	6	0.003	0	0.1	33	2,528
의회사무과	2	20	40	10	10	100	140	0.064	2,495	1.0	3,218	29,775
재무과	4	2	6	0.5	0.25	0.1	6	0.003	26,557	1.25	9,992	13,421
종합민원과	0.6	0.6	0.4	0	0	0	0	0.000	3,430	0.0	0	166
주민자치과	4	5	20	6	5	30	50	0.023	166	5.0	12,348	22,690
지역경제과	3	3	7.5	2.5	3	7.5	15	0.007	10,342	7.5	45,000	50,461
해양수산과	13	4	52	1	36	36	88	0.040	5,461	15.0	33,853	61,663
환경녹지과	0	0	0	0	0	0		0.000	27,810	0.2	816	816
총무과	3	1	3	11	2	22	25	0.011	13,192	1.2	50,264	63,456
발지법 적용 지역												
백수읍	0.6	0.3	0.2	0.3	0	0	0	0.000	58	1.3	1,300	1,358
법성면	5.0	3.5	17.5	6.5	3.0	19.5	37	0.017	11,260	6.5	20,915	32,175
홍농읍	1.3	2	3	1	1.3	1.3	4	0.002	1,436	3.0	16,495	17,931
총합계	-	-	-	-	-	-	-	-	142,525	-	475,406	617,930

3) 기회비용의 추정

원전건설에 따른 행정력(공무원 및 경상비) 손실에 대한 기회비용이란 각종 분쟁 및 집회로 인한 공무원 행정력의 손실을 의미한다. 즉, 원전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나 집회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력 누수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집회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그리고 사전 준비 및 사후처리시간 등을 고려한 기회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군민이나 전경에 대한 경제적 인력손실분은 공무원 행정력 손실비의 기회비용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설문결과에 의하면 각 부서별로 발생하는 비용은 <표 16>에 정리되어 있으며, 2004년도 기준으로 기회비용으로 손실된 행정비용은 인건비 1억4,200만원, 경상비 4억7,500만원으로 총합 6억1,800만원이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총비용의 추정

앞에서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에 의한 영광군 행정력 누수비용은 <표 17>에 정리된 바와 같이 직접비용 손실액 26억2천만원, 간접비용 손실액 13억천만원, 기회비용 손실액 6억2천만원을 모두 합하면 2004년도의 경우 약 45억5천만원에 다다른다. 이 금액은 2004년 영광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 1,759억원의 약 2.59%에 달하는 금액이다. 또한, 직접비용 손실액 계산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요측면이나 공무원의 공급측면의 부족액을 반영한다면 약 1억8천만원이 증가된 28억원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 경우 총 보상액 수준은 47억원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앞 절의 <표 7>과 <표 8>에서 보듯이, 영광군 재정상 보통교부세의 기여

<표 17> 공무원 행정력 총 손실액

(단위: 천원)

직접비용 손실액 (A)	보정된 직접비용 손실액 (B)	간접비용 손실액 (C)	기회비용 손실액 (D)	총 손실액 (E=A+C+D)	보정된 총 손실액 (F=B+C+D)
2,621,600	2,800,000	1,306,000	617,930	4,545,530	4,723,930

<표 18> 공무원 행정력 순손실액

총 손실액 (E)	보정된 총 손실액 (F)	순 원전 세수입 (G)	순 손실액 (E-G)	보정된 순 손실액 (F-G)
4,545,530	4,723,930	1,900,000	2,645,530	2,823,930

분은 원전수입을 반영한 보통교부세와 원전수입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보통교부세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즉, 2002-2004년의 3년 평균 63억원이 원전수입으로 인해 증가된 금액으로, 원전으로 인해 순수 세수입(기준 지방세 재정수입+보통교부세 수입)의 증가액은 2002년-2004년 3년 평균 19억원으로 영광군의 재정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영광군 공무원 행정력의 순수 손실분은 <표 18>에 나와 있듯이 재정수입 19억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약 26억5천만원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요 및 공급상의 적정보상액 1억3천만원을 감안하면 약 28억2천만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영광원전에 따른 행정력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의 규모를 정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회계자료와 영광주민 및 공무원 면접 및 설문을 통해 행정력 손실액을 크게 직접비용 손실액, 간접비용 손실액, 그리고 기회비용 손실액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광군은 원전시설에 따른 다양한 직접, 간접적인 행정력 누수를 겪고 있으며, 행정력의 순손실액은 약 26억~28억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행정력 손실 보상을 위한 차별적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행정력 지원차원에서 방사능 방재대책 전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준정원을 조정하여 공무원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발지법 지원금 산정방식을 개정하여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원전관련 지방세 수입을 보통교부세 산정자료에서 일정액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발지법 지원금 산정방식의 개정은 직접적으로 원전에 대한 행정손실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현재 수준의 19억원에서 행정력 누수액 27억원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반면,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의 수정은 간접적으로 원전에 대한 행정손실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일반세목으로 운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전에 대한 특별세 등의 형태로 재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시도한 행정력 손실액에 대한 정량적인 추정작업은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존의 일반론적 사회과학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책적 사안을 경제학적 개념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사회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적 사업에 대한 행정 비용의 평가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원자력이용이 사회·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관한연구」 2002. 4.

김태기, 구재운, 이상호, 김상호, 장덕기,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원전이 우리지역에 미친 영향 평가」 2005. 12.

영광군, 영광군 통계연보 각년도.

영광군, 영광관련 신문기사 모음집, 1995~2004.

영광군, 영광군지, 1997.

영광군청 발지법 개정관련 2005년 5월 자료.

영광군청 홈페이지, yeonggwang.jeonnam.kr

영광군통계연보, yeonggwang.jeonnam.kr/stat/index.html

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 khnp.co.kr/youngkwg/yknew/index.jsp

한국전력공사전력연구원 「영광원자력발전소주변 일반환경조사 및 평가보고서」 1983-2005.

한수원 영광원자력 홈페이지, khnp.co.kr/youngkwg

[부록] 행정력 손실 추정을 위한 설문지

1. 다음은 행정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업무부서는?

(2) 귀하의 직위는?

(3)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행정업무는 주로 무엇입니까?

(4) 2004년도 귀과에 배정된 예산규모는 얼마입니까?

	항 목	귀부서	총액(2004년기준)
일반회계	인건비		영광군 전체 1,727억원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비 (일반행정비)		
	기타 (사회/경제 개발비 등)		
	총계		

2. 다음은 일반적인 원전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인 원전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원전지원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방사능 방재 대책 관리 및 추진
- ○ 원전관련 환경 관리,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추진,
- ○ 원전관련 각종 지방세 부과 징수, 원전부지 내 국 공유재산 관리
- ○ 원전관련 각종 인허가
- ○ 기타

(5) 귀하의 업무중 원전관련 업무는 무엇이 있습니까?

(6) 귀하는 본연의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원전관련 업무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 귀하는 영광군 주요 업무 중 원전관련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8) 귀하는 일주일 평균 몇 시간 정도 원전관련 업무를 처리하십니까?

(시간 정도)

(9) 귀 부서에서 원전관련 업무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처리비는 귀 부서의 2004년도 경상비(인건비 제외) 예산에서 대체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도)

3. 다음은 원전관련 집단민원(집회 및 시위방지) 관련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10) 귀하는 원전관련 집단민원 및 집회시위를 직접 관여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10-1) 원전관련 집단민원 및 집회시위를 직접 관여한 경우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① 년 1~2회 ② 반기 1~2회 ③ 분기 1~2회 ④ 월 1~2회 ⑤ 전혀 없음

(10-2) 원전관련 집단민원에 직접 관여한 경우 1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모되었습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2시간 정도 ③ 3시간 정도
④ 4시간 정도 ⑤ 5시간 이상 ⑥ 기타( )

(11) 원전관련 집단민원 관련 사전 면담 및 회의, 그리고 사후처리 문제로 동원된 경험이 2004년도의 경우 몇 회 입니까? (회)

(11-1) 집단민원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문제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면 1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추가적으로 손실되었습니까? (시간 정도)

(12) 귀 부서에서 집단민원 문제로 인해 소요되는 행정처리비는 귀 부서의 2004년도 경상비(인건비 제외) 예산에서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도)

(13) 집단민원 문제가 본연의 주요한 행정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Abstract>

An Effect of Nuclear Power Plants on Yeong-Gwang Province: The Loss of Administrative Costs

Sang-Ho L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umi Cho

Graduate Student of Economic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Yeong-Gwang nuclear power plants have contributed positively on the local economy of Yeong-Gwang province with the various forms of activities and supports. However, because of nuclear accidents and their externalities, they have caused very high workloads on administration parts in Yeong-Gwang province, which include civil petitions, unlawful assemblies, and continuous demonstrations.

Using the survey data of public administrators, this study examines and estimates the effect of nuclear power plants on the loss of administrative costs. We classify the administrative costs into three different concepts: loss from direct cost, loss from indirect cost, and loss from opportunity cost.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the loss of administrative costs is significant and meaningful and thus, the government should work out to develop a progressive policy alternative to alleviate the workloads on administration parts, in Yeong-Gwang province.

Keywords: the loss of administrative costs, nuclear power plants